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1호

체육시민연대성명서

학교운동부 인정결석 축소 정책은 흔들림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심석희, 대한체육회 재심 청구 포기

하성룡 SBS NEWS 기자

[선택 2022-스포츠]

‘세부정책바란다’ 못다한 스포츠 윤리 바로세우기

김윤일 데일리안 오피니언 기자

장애인체육 폭력 피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인천 장애인수영 학부모 만나 허리 숙인 문체부 차관

전영지 스포츠조선 기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고뇌에 빠진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폰서 기업들, 인권이냐 돈이냐

배준호 이투데이 기자

스포츠기고

2022, 스포츠3법이 만들 건강한 생태계

신용락 법무법인 원 구성원 변호사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보 도 자 료



배 포 2022년 01월 05일(수)

보도일시 2022년 01월 05일(수)

전 화 02) 2279 - 8999

홈페이지 www.sportscm.org

성 명 서

학교운동부 인정결석 축소 정책은 흔들림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2019년 2월 발족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학습권은 ▷선수'학생'이 비판적 사고력을 갖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이며 ▷직업선수나 지도자뿐 아니라 스포츠 행정, 교육, 연구, 미디어, 등 스포츠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소양과 학습 능력을 제공하는 권리이며 ▷모든 선수'학생'이 직업선수로 성공하기 힘든 현실에서 다양한 직업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라고 천명하였다. 이는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권고한 여러 정책 중 하나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운동부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스포츠 선진국에서는 주말이나 방학 중에 대회를 진행하고 정규수업이 있는 날에는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그러니 훈련이나 대회 참가로 인한 결석을 교육부가 출석으로 인정하는 일은 아예 없다. 즉,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은 세계 체육 정책 흐름에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2019년 9월,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 및 주말 대회 전환에 대해 종목별 특성에 맞게 단계적 시행이라는 절충안을 꺼냈다. 작년 3월에는 스포츠혁신위원회가 학생선수의 주중 대회 금지와 주말 대회 전면화를 2021년까지 실행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회를 주중이 아닌 주말로 전환할 수 있는 종목부터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년 12월 대한체육회는 돌연 11개 체육유관단체와 연대하여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참가 허용일수 축소'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부의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축소 검토안'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이해 당사자인 학생선수, 선수 학부모, 지도자 및 관련 체육단체 등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득과정 없이 수립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은 시도 교육청 및 체육단체, 학부모, 지도자, 장학사, 시도 교육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논의한 결과이다. 또한 교육부의 학교운동부 인정결석 축소정책은 수년 전부터 행정예고 해왔으며 해마다 점진적으로 축소 절차를 밟아왔다. 대한체육회는 이제 와 뒤늦게 교육부 정책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학교운동부는 고립과 단절로 더이상 존속할 수 없다. 대한체육회는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변화를 방해하고 저지하는 것이 그들의 소임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선진화된 체육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자기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작년 3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지금의 행보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고 학생선수 제도의 올바른 방향 설계를 위해 해외사례와 우리나라의 정책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길 희망한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정상화 정책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학생선수의 학업 결손 문제, 운동 중도 포기 시의 진로장벽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학생선수 인정결석 축소 정책은 흔들림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2022.01.05.

체육시민연대

심석희, 대한체육회 재심 청구 포기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아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무산 위기에 놓인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소를 포기했습니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심석희는 대한체육회 공정위 재심 청구 마감일인 어제(29일)까지 신청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심석희가 재심 청구를 포기하면서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할 방법은 법원 판결만 남았습니다.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 결정을 받으면 대표 선수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심석희 측은 법적 다툼을 벌일지 아니면 연맹 징계 결과를 받아들일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심석희의 베이징행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국제빙상경기연맹의 각국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24일까지입니다. 대한체육회는 1월 23일 연맹으로부터 엔트리를 받아 24일 제출할 예정입니다. 심석희가 1월 23일까지 대표팀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심석희가 법적 다툼에서 승리해 대표 자격을 회복해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올림픽 대표팀 최종 명단은 빙상경기연맹과 대한체육회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경기력 향상위원회는 선수 부상 상태와 기량을 고려해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동안 실전 경기와 대표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한 심석희는 위원회를 통해 명단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심석희는 평창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대표팀 동료와 코치를 비하하는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난 21일 빙상연맹 공정위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선택 2022-스포츠] '세부정책 바란다' 못 다한 스포츠 윤리 바로 세우기

‘맞을수록 강해진다’, ‘폭력의 대물림’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한 한국 체육계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불편한 말들이다.

국제대회에서의 선정 등 꾸준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체육계는 내부적으로 선배나 지도자에 의한 선수 (성)폭력 등 인권을 훼손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대표적인 예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 불거진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 증언이다. 이로 인해 스포츠강국의 화려함 이면에 감춰졌던 어두운 자화상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고 급성장한 외면에 어울리지 않는 내면이라는 혹독한 평가가 뒤따랐다.

스포츠 인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두웠다. 대한체육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신고 센터 등이 엄연히 존재했으나 제 기능을 하지 않았고 결국 트라이애슬론 고(故) 최속현 선수의 사망 사고를 막지 못했다.

좀처럼 바뀌지 않는 스포츠계 윤리 의식도 문제다. 지난해 불거진 여자 배구 쌍둥이 자매(이재영, 이다영)의 학창 시절 학교 폭력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번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남자 배구 대표팀 코치 시절, 박철우에게 폭력을 가했던 이상열 전 KB손보 감독이 자진 사퇴하는 등 아몰지 않았던 상처들이 다시 회자되기도 했다.

문체부는 2018 평창 올림픽 직후 스포츠 인권침해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로 대두되자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교 운동부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는 충격이었다. 대한체육회 등록 초·중·고 학생선수 6만3,211명(2019년 5월 기준) 중 최종 5만 7,557명(응답률 91.1%)이 조사에 참여했고 이들 중 15.7%가 언어폭력, 14.7%가 신체폭력, 그리고 3.8%가 성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선수들 중 약 34.2%가 운동을 하면서 폭력을 경험한 셈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언어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됐고(19.0%), 중학생(15.0%)과 고등학생(16.1%)의 경우에는 신체폭력 경험이 가장 많았다. 성폭력의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3.8%(100명 중 약 4명)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중학생이 4.9%(1,07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이와 같은 폭력 가해자가 주로 지도자, 그중에서도 코치였다는 사실이다(평균 40%). 뿐만 아니라 폭력 장소 역시 체육관이나 운동장이었고, 폭력을 당한 이유는 ‘가해자(주로 지도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서’가 평균 18%로 나타났다. 체육계에 잔존하고 있는 폭력적 위계문화가 여실히 드러난 장면이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 직후 국가대표 선수의 폭력 및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자 곧바로 대책안 마련에 나섰고 최속현 선수 사망 사고 이후 모든 역량을 집중 시킬 수 있는 스포츠 윤리센터를 출범시켰다.

스포츠 윤리센터는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가해자 처벌 현실화,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종합적 지원을 하는 곳이다. 그동안 여러 곳에 분리되어 있던 조사 및 신고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였으며 체육계 악습의 고리를 끊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에 기여한다는 뚜렷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출범 후 약 1년 5개월이 지났고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스포츠 윤리센터 관계자는 “기관 설립 이후 스포츠윤리 관련 인식조사 등은 아직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영향 파악은 어렵지만 출범 이후 올해 12월(21일 기준)까지 460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절반이 넘는 239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 심의위원회를 통해 130건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에도 신고 및 상담과 조사, 교육, 징계이력정보시스템 등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여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려움도 있다. 조사 및 징계권한이 허약하고,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하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스포츠 윤리센터에 조사 권한이 명시돼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사건 조사 시 피신고인이 진술이나 조사를 거부하여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를 인지한 국회에서도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감시할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며 시급한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징계권한도 마찬가지다. 현재 스포츠 윤리센터는 징계요청 권한만 있을 뿐, 직접적인 징계 권한이 없어 조사를 통해 혐의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징계를 강제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징계는 각 시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있어 ‘체육계에서 독립된 인권감시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이 제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예산 부족은 스포츠 윤리센터가 출범했을 때부터 대두된 문제점이다. 스포츠 윤리센터 측은 “조사와 상담, 교육, 징계정보이력시스템 발급 등 전체 체육인 대상의 법정과업을 수행하기에도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윤리센터가 권위와 역량을 갖추고 완전 독립된 체육계 인권 및 비리 감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윤리센터의 운영 및 역할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후보들은 각 분야 정책들을 내걸면서 표심 잡기에 한창이다.

이 가운데 체육계 공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스포츠 윤리 의식 제고’가 손꼽힌다.

현 정부는 지난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최속현법'을 제정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최속현법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윤리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사건, 사고가 터진 후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체육인들의 올바른 윤리 의식 함양이 우선되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스포츠의 외형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보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폭력피해’ 인천 장애인수영 학부모 만나 허리 숙인 문체부 차관

"장애인 체육 현장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체육계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제2차관이 30일 오후 3시30분 인천시 연수구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지도자 폭행 피해를 입은 장애인 수영선수 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과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인천시장애인수영연맹 소속 코치 A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영장에서 훈련중 10~20대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장애인 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는 강대금 문체부 체육협력관, 용필성 장애인체육과장, 양충연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이종원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등이 함께 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였다.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오 차관은 학부모들에게 "저는 문체부에서 체육을 담당하는 차관이다. 30년간 문체부 공무원으로 일했고, 사무관에서 체육국장까지 5~6년 체육쪽에서 일했다. 3주 전 예술, 문화를 담당하는 제1차관에서 체육을 담당하는 제2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자신의 이력을 친절하게 소개했다. 오 차관은 2019년 1월 빙상계 성폭력 의혹 사건 당시 체육국장으로 제도 혁신과 쇄신을 이끌었던 자타공인 문체부 내 체육 행정 전문가다. 문재인 정부 말기 문체부 차관 인사는 임기 내내 지속해온 스포츠계 인권 강화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오 차관은 "문재인 정부는 스포츠계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임기 말까지 최대한 관심을 갖겠다는 뜻을 품고 있다. 모든 방법을 다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것이 대통령님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지난주 스포츠윤리센터 첫 방문했던 오 차관의 이날 장애인 스포츠 현장 행보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겼다.

오 차관은 학부모들을 향해 허리를 낮췄다. "장애인 스포츠 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 이 자리를 오늘 방문하게 됐다. 학부모님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현장까지 이어지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체육계 모순, 특히 장애인체육 현장의 모순과 비리가 척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2019년 심석희 선수 건이 있었고, 작년 고 최숙현 선수 건이 있었다. 이후 스포츠 인권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체육계의 염원을 받아 제도 개선과 정비도 적극 추진했다"면서 "올해, 작년 법 개정을 통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체육계 현장의 문화나 인식, 공감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오 차관은 "사건과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보고를 받고, 기자들도 만났다. 부모님 의견을 서류로 받았지만 직접 말씀을 듣고 해결책과 건의 사항도 듣고 싶어 이곳에 왔다"며 현장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저나, 여기 함께 온 장애인체육 담당 국장, 과장, 실무자들에게 언제든지 의견을 달라.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오 차관은 훈련중인 인천장애인체육회 소속 수영선수들을 만나 격려했다. 오 차관은 환한 표정의 선수들을 향해 "여러분이 마음껏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운동을 마음껏 하면 좋겠다"는 진심을 전했다. "재미있게 운동하자!"는 제안에 선수들이 씩씩하게 한목소리로 "네!"를 외쳤다.

고뇌에 빠진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폰서 기업들, 인권이나 돈이나

중국 인권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폰서 기업들이 고뇌에 빠졌다.

일부 브랜드는 올림픽 마케팅 활동에서 개최도시 베이징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광고회사나 마케팅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림픽 기간 올림픽을 테마로 하는 광고를 아예 내지 않을 브랜드도 있다. 비싼 돈을 주고 올림픽 후원사가 됐는데 이를 전혀 활용할 수 없게 된 처지에 놓인 것이다. 올림픽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PR회사에 조언을 요구하는 기업도 있다.

올림픽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중 하나다. 기업들은 2018년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컴캐스트의 NBC유니버설에서 방영된 미국 전역 TV 광고에 9억2000만 달러(약 1조934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

그러나 이번에 기업들은 미국 정치권과 인권단체로부터 올림픽에서 철수하고 중국 인권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지난달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무자비한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에 자국 관리를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신장에서의 인권 침해는 미국이 낯조한 것"이라며 "스포츠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은 지난달 초 코카콜라, 인텔, 도요타 등 올림픽 주요 후원사들에 "베이징올림픽 광고를 모두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기업들에 중국 인권 침해에 대처하기 위해 자사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중대한 수익원이자 거대한 시장인 중국을 멀리하는 것은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 큰 리스이다. 이에 마케팅 전문가들은 스폰서 기업 대부분이 중국에 대해 공식적 의견을 내는 것을 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당시 미국 올림픽위원회 마케팅 책임자였던 릭 버튼 시러큐스대 교수는 "기업들은 자신의 행동이 중국 정부에 어떻게 해석될지 우려하고 있다"며 "역사를 되돌아보면 기업이 목소리를 내면 중국은 보복했다"고 말했다.

주요 올림픽 후원사인 인텔은 최근 공급업체들에 신장으로부터의 조달을 피하도록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인텔은 해당 이슈에 사과하면서 "이는 신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오미크론 새 변이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도 기업들을 울상 짓게 하고 있다. 올림픽 광고에서 일반적 방법인 특정 선수에 초점을 맞춘 광고를 쓰는 것이 평소보다 많이 어려워졌다. 앞서 북미프로아이스하키(NHL)는 지난달 코로나19를 이유로 리그 소속 선수들의 올림픽 불참을 선언했다.

2022, 스포츠3법이 만들 건강한 생태계



신용락 법무법인 원 구성원 변호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헌법은 명시하고 있다(제10조, 제34조).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데 스포츠만큼 유용한 수단은 없다고 본다. 그리고 2022년은 대한민국의 스포츠정책사에 획을 긋는 해가 될 것이다. 10여 년의 노력 끝에 탄생한 스포츠기본법, 스포츠클럽법, 체육인복지법 등 스포츠3법이 시행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은 엘리트 체육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국가스포츠주의의 길을 걸어왔다. 엘리트 체육 성장의 그늘에는 폭력 등 인권 문제, 편법과 부정 등 윤리 문제, 기초교육 기회 박탈과 그로 인한 낙오자 문제, 정치조직화 문제 등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스포츠인권위원회의 활동, 체육조직 통폐합, 학생선수 교육규제 등 여러 시책들이 펼쳐졌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의 또다른 부작용으로 올림픽 성적 세계 10위 이내 스포츠 강국이던 대한민국의 위상은 도쿄올림픽 16위로 추락하고 말았다.

체육활동에서 배제되다시피 한 청소년들은 더 문제다. 1990년대 중반까지 고교입시와 대학입시에 반영되던 체력장을 폐지하고, 입시위주 교육으로 학교체육이 무력화된 결과, 한국 청소년의 기초체력은 선진국들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으로 추락한 게 사실이다. 체육활동은 육체 건강뿐만 아니라 두뇌활동을 자극하여 정신건강과 학습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체육은 사실상 실종되었다. 체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가 4달러 절약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 중 체육 분야 지출은 고작 0.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스포츠3법은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고 학교체육,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을 유기적으로 활성화할 목적으로 탄생했다. 스포츠계의 실태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에서 따로 주관하던 정책 효과를 분석, 종합해 국가스포츠 대계를 수립하는 게 절실하다.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이 한데 어우러지는 상생의 선순환 시스템이 2022년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체육 생태계이다.

이 같은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선 각 이익집단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하다. 규제혁신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고, 스포츠평화 등을 통해 공적 자본의 확충을 도모하여 스포츠산업 생태계 파이를 키운다면, 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해지고 고용촉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온 국민이 스포츠를 통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춘 인격체로 성장하고, 노후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나라, 다가오는 2022년 새해가 '스포츠를 통한 대한민국 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됐으면 좋겠다.

주간 스포츠 소식

경기도, 내년도 체육 예산 올해 대비 약 30% 증액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28_0001703659&cID=10803&pID=14000

문체부 "장애인체육 인권 보호, 피해 대처 지원 강화"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1231000007>

[신년특집] 2022년은 스포츠 빅 이벤트의 한해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949>

'막대기로 직원 찢러 살인 혐의' 스포츠센터 대표 구속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03_0001710399&cID=10201&pID=10200

스포츠토토코리아 "청소년 스포츠도박 이용은 불법"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201040100015030000768&servicedate=20220103>

한국e스포츠협회, 대한체육회 준회원 가입 승인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28_0001704888&cID=13001&pID=13000

올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된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103010000548>

"이맘때가 대목인데" ...거리두기 연장에 실내체육시설 '울상'

<https://www.yna.co.kr/view/AKR20211231112500061?input=1195m>

의경 복무 중 후임 괴롭힌 현직 체육교사, 벌금 300만원?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123014278035876>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